“시민·상인들 도움이 화재 피해 최소화 지름길”

●광주 동부소방서 ‘길 터주기’ 훈련

대인·남광주시장 등서 소방차 3대, 소방관 등 60여명 참여

갓길 이동 등 대체적 원활 불구 불법주정차 차량에 지체도

광주 동부소방서는 19일 오후 대인시장 등 관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의 범시민적 관심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김애리 기자

“시민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19일 오후 2시께 광주 동구 대인시장.

광주 동부소방서가 주최한 ‘길 터주기 훈련’ 시작 시간이 되자 붉은 사이렌 빛과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훈련은 지휘차, 펌프차, 순찰차 등을 포함한 총 4대가 투입됐고 소방관 10여명, 의용소방대원 50여명이 참여해 ‘대인시장-남광주시장-예술의 거리-충장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전자상가 거리’ 순으로 진행됐다.

선두에 선 지휘차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시작합니다”라는 멘트가 나오자 펌프차 2대가 차례로 시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시장 골목을 지나는 내내 지휘차에 탑승한 소방대원은 외부 스피커를 이용해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합시다”, “소방차에게 양보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의 홍보 문구를 안내했고 미리 갓길에서 대기하고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이에 맞춰 홍보 팻말을 흔들었다.

소방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장을 보고 있던 일부 시민들이 사이렌 소리에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대부분 곧장 옆으로 몸을 피하거나 잠시 멈춰서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굳이 크게 사이렌을 울리지 않아도 시민들과 차량 운전자들은 갓길로 이동해 길을 만들어 주는 등 대체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구간에선 불법주정차 인해 훈련이 지체되기도 했다.

실제 전자상가 거리로 들어서자 양옆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애를 먹었으며, 길목 중간에 주정차를 해둔 뒤 자리를 비운 운전자로 인해 10여분가량 움직이지 못한 채 멈춰서 있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우상 동부소방서 훈련주임은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시민들이 길 터주기에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면도로 등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여전히 진입이 어려운 구간들이 존재한다”며 “시민들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위급상황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기봉 동부소방서 119 재난대응단 현장지휘 1팀장은 “최근 동구 지산동 제2순환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 간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차량들이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주기적인 길 터주기 훈련 등을 통해 그러한 인식들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정 기자

檢, 승진 청탁 경찰관들 ‘무더기 실형’ 구형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 3건서 전·현직 6명 각각 6개월-2년

검찰이 19일 잇따라 열린 ‘사건 브로커’ 관련 재판에서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 6명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이날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4명과 제삼자뇌물취득 혐의를 받는 성모(63)씨, 퇴직 경찰 이모(66)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현직 경찰 4명은 지난 2021년 성씨 등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적게는 1천500만원, 많게는 3천만원 등의 금품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는다.

퇴직 경찰 이씨는 성씨 등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다른 사람을 거치지않고직접금품을받기도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현직 경찰 3명에게 각각 6개월-2년의 징역형을, 성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직 경찰 1명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려 하고, 퇴직 경찰 이씨는 ‘별건 수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특히 이씨의 경우 광주·전남 수사기관에 부당 영향력을 행사한 성씨마저 청탁을 한 ‘문고리 브로커’로, 현직 경찰들과 함께 기소된 이 재판과 별도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열린 별도 재판에서 이씨 측은 승진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제삼자뇌물취득)은 인정했으나, 검찰의 증거에 대해선 부동의 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씨 사건에서 나온 증거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브로커의 검찰 조사 기록을 열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는데, 이는 성씨가 전남 시·군의 관급공사를 부당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씨 측은 조사 기록 열람 대신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성씨를 심문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씨에게 현직 경찰들로부터 전달받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퇴직 경찰에겐 징역 1년이, 사건 브로커 수사를 통해 승진 청탁 비위가 드러난 전·현직 경찰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이 구형됐다. /안재영 기자

역주행 이륜차·1t차 충돌…80대 사망

역주행하던 8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t 견인차와 충돌해 숨졌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2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나주 방향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A(80대)씨의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오던 B(60대)씨의 1t 견인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800m가량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견인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고 당시 두 운전자 모두 음주·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주성학 기자

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캠프 등 압수수색

‘기부행위’ 혐의 증거 확보 차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안 예비후보 캠프와 피고발인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이병훈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은 광주지검에 제출됐으나,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이병훈 의원(민주당 현역)이 하위 20%로 평가됐다’는 허위 글을 안 예비후보 캠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유권자와 권리당원 등이 포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및 식사 비용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이병훈 의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명예훼손·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매국노’ 표현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23·광주은행)이 19일 “저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신 해당 외식업체 대표님과 점주님,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안산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이자 공인으로서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일본풍 주점을 ‘매국노’에 빗대 파문을 일으킨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다.

그러면서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이렇게 큰 실망과 피해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국제선 출국(일본행)’이라고 일본식 한자로 적힌 전광판 사진을 올리며 별다른 설명 없이 “한국에 매국노 왜 이렇게 많냐”고 적었다.

이 전광판은 광주 광산구 소재 한 쇼핑몰의 일본 테마거리 입구 장식을 위해 설치됐다.

안산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캡처된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일본풍 주점에 대한 이른바 ‘악플’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안산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후 SNS에 입장문을 내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심심한 사과의 글을 올려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